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대폭 강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폐기물배출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아무 곳이나 보관하는 바람에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등 폐기물배출업체는 지금까지 3-6개월 내에서 자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야적하거나 보관해왔으나 8월부터는 보관기간이 45-90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폐기물처리업체도 지금까지 3개월 이내에서 보관이 가능했으나 2월부터는 보관기간이 1개월로 단축됐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이나 하천의 환경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관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그동안 사업장폐기물은 옥외보관이 허용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다만 옥외보관의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말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11만 5천 t 규모로 IMF의 영향으로 전년의 13만보다 1만 5천t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사업장폐기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발돼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모두 1천 463건으로 이 가운데 보관기준을 어긴 것은 289건으로 파악됐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산업폐수 배출시설 제한지역 확대

산업폐수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폐수종말처리장도 개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부적정 처리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을 10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주요 상수원 호소 및 상류, 취수시설지역과 상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현재 산업폐수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경기도 팔당과 대청특별대책지역 두곳 뿐이다.

환경부는 중금속 등 특정위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입지제한지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장과는 달리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관계법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는 행위 ▲폐수를 최종방류구 이외로 배출하는 행위 ▲폐수를 희석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중금속 등 특정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시설물에 대한 설치제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과정에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받게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 실적 매년 감소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공사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공사실적은 모두 3천714건에 공사금액은 1조7천5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공사금액은 지난 95년 1조 956억9천300만원, 96년 1조5천400억원, 97년 1조7천 313억원, 98년 1조7천580억원 등으로 연간 18% 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사건수는 지난 95년 6천79건, 96년 5천 890 건, 97년 5천628건, 98년 3천71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도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매년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평가다.

이에 비해 방지시설업체수는 지난 98년 775개로 97년의 793개보다 줄어들었으나 지난 95년의 735개, 96년의 769개 보다는 늘어났다.

방지시설업체의 이런 부침현상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난립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지시설업체의 지난 98년 수주실적은 286개 대기업이 전체 공사 금액의 79%인 1조3천882억원을 차지했다"면서 "반면 430개 중소기업의 수주실적은 21%인 3천697억원에 불과해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도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매년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평가다.

이에 비해 방지시설업체수는 지난 98년 775개로 97년의 793개보다 줄어들었으나 지난 95년 735개, 96년의 769개 보다는 늘어났다.

방지시설업체의 이런 부침현상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난립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환경 관계자는 "방지시설업체의 지난 98년 수주실적은 286개 대기업이 전체 공사금액의 79%인 1조3천882억원을 차지했다"면서 "반면 430개 중소기업의 수주실적은 21%인 3천697억원에 불과해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오염물질처리기준 등 환경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부문의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 대폭 강화

오존오염과 공단지역 악취의 주범인 벤젠, 휘발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해마다 VOC 배출량이 10% 가량 증가함에 따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페인트, 자동차, 선박제조업체들과 폐기물보관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대형세탁시설, 기타제조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VOC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VOC는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벤젠, 아세틸렌, 부탄 등 탄화수소류 물질로 석유정제, 페인트 도장, 자동차 운행 등을 통해 배출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의 배출량은 연간 21만8천478t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해당업체들에 대해 VOC 억제 및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이를 어길때는 계도명령(1차 위반시)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차 위반시)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VO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오존오염을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환연, "도시폐기물 배출규제 항목 과다" 지적

국내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규제 항목이 너무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의 규제항목이 시설 배출특성을 파악한 뒤에 설정돼야 하는데도 다른 배

출시설과 똑같은 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 1월 밝혔다.

국내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규제항목은 가스상 오염물질 16개와 입자상 9개 등 모두 25개다. 이는 가스상 오염물질 3개와 입자상 1개 등 모두 4개인 일본에 비해 21개나 많은 것이다.

또 가스상 오염물질 5개와 입자상 6개 등 13개 항목인 독일과 비교해서도 12개가 각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행 배출규제항목을 모두 측정·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이 들어가게 된다.

지난 98년의 경우 전국 9개 대형 도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등 가스상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카드뮴(화합물포함),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니켈(화합물포함), 아연화합물 등 입자상물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연구원측은 “외국의 경우 규제항목은 적지만 배출허용기준치는 엄격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독일은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비소, 납, 카드뮴, 크롬, 망간, 니켈 등의 합산농도로 설정돼 있어 가장 많은 중금속항목을 가장 낮은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한국도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확한 배출특성을 파악한 뒤 중복되는 항목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율목 확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조업체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및 출연기관 등 638개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시 우선구매해야 하는 재활용품 대상품목수를 현재의 85개에서 145개로 확대해 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주원료별로 보면 폐플라스틱류가 24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폐콘크리트 및 건축폐기물 7개 품목, 종이류 및 고무류 각각 6개 품목, 슬래그 및 연소재 4개 품목 등이다.

추가되는 폐플라스틱류는 주차멈춤턱용 차마이 경계블록, 철도침목, 인공어초, 육묘상자 등이다. 또 폐고무류는 재생고무아스팔트, 놀이터 바닥재, 고무경계블록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 및 건축폐기물류는 콘크리트 벽돌과 블록, 도로포장재, 도록경계석 등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내년7월 수도요금 누진제 도입 추진

수도요금에도 누진제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금체제도 고쳐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량 사용자는 요금부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낮게 조정하되 다량 사용자는 월등히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달 평균 10t 가량의 수도물을 사용, 2천원의 요금을 내던 사람이 월 20t을 쓰면 1만원,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절요율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앞으로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봄, 가을 등 사용량

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대기환경기준치 국가기준보다 강화

인천시는 국가가 정한 대기환경 기준치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치를 자체적으로 마련, 올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아황산가스(SO₂) 및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대해 국가 환경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설정,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 기준치 0.03ppm인 아황산가스는 0.015ppm으로, 9ppm인 이산화탄소는 7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산화질소도 0.05ppm에서 0.04ppm으로, 미세먼지는 80 μ g/m³에서 60 μ g/m³으로 기준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납은 0.560 μ g/m³로 국가 기준치 1.560 μ g/m³보다 대폭 강화했다.

반면 오존(O₃)은 차량 등의 증가로 오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 기준치(0.06ppm)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3개년 계획 추진

자동차와 전자 등 주요 업종에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도입, 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을 환경친화적 체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이 선진국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낙후돼 있다고 보고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

적 산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현재 3천 200억원 수준인 청정생산투자 자금을 장기적으로는 1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요타와 소니 등 외국 기업의 청정생산방식을 벤치마킹, 자동차와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청정생산 비전을 제시하고 청정생산기술과제를 발굴, 중장기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환경설비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다이옥신제거기술,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등 미래 유망 환경설비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우수 국산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한 시장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Eco-Industrial Complex)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원료조달과 제조 등 산업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기법과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등 선진환경경영기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환경비용이 제조원가의 10%를 차지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마케팅의 주요 관건이 되는 등 환경문제가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환경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97년에 이미 제약산업과 항공산업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2005년에는 5천5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주력산업의 청정생산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20~70%에 불과하며 환경경영체제(ISO-14001)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